

2015년 100대 인권지표 평가결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

순 서

I. 평가개요	1
II. 추진경과	1
III. 평가방법	2
IV. 2015. 인권지표 총평	4
V. 분야별 인권지표 결과 분석	8
VI. 향후 추진계획	17

< 붙임자료 >

[붙임 1] 100대 인권지표 구성

[붙임 2] 100대 인권지표 정성평가(설문조사) 결과

[붙임 3] 인권지표 개선 검토

[붙임 4] 2015년 인권지표 추진실적 (상세)분석

[붙임 5] 인권지표 15년 추진실적 및 16년 계획

2015년 100대 인권지표 평가결과

광주공동체의 인권수준을 측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광주 인권현장의 실천도구인 100대 인권지표의 2015 평가결과 보고

I 평가개요

- 평가근거 :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평가기간 : 2016. 1월 ~ 3월
- 평가대상 : 2015년도 5대 분야 18대 영역 100개 인권지표(145개 하위지표)
- 평가방법 : 하위지표 정량평가(131개) 및 정성평가(14)
 - 정량평가 : 관련기관 및 부서 자료 취합
 - 정성평가 : 외부기관(광주전남연구원) 의뢰 등 설문조사

영역별	지표	하위지표	하위지표	
			정량	정성
합계	100	145	131	14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11	20	14	6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27	32	30	2
제3장 사회적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27	42	38	4
제4장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	17	25	24	1
제5장 문화창조 연대도시	18	26	25	1

II 추진경과

- 100대 광주지표 발표 : '12.5.21.
- 인권지표 세부실천계획 작성 : '12.9.~'13.1.
- 인권지표 실천결과 평가 및 설문조사 취합 : '14.1.~3.
- 13년 100대 광주지표 평가보고 : '14.4.25.
- 2014 인권지표 보완 및 실천 : '14.4.

- 2014년 실적 취합 및 정성지표 설문조사 : '14.11.~'15. 2.
- 100대 인권지표 개선·보완(전문가TF, 인권증진시민위원회): '14. 9.~'15. 3.
 - 100대 지표내 하위지표 추가·삭제, 측정산식 개선 등
- 2015년 100대 (개선)인권지표 추진 : '15. 4.~
- 2015년 정량평가(설문조사) 실시 : '15.12.~16.2.
- 2015년 실적 및 2016년 추진계획 취합·분석 : '15.12.~'16.3.

III 평가방법

영역별	지표	하위 지표	산출가능 지표			
			지표	하위지표		
				합계	정량	정성
합 계	100	145	88	115	101	14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11	20	11	17	11	6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27	32	20	24	22	2
제3장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27	42	25	32	28	4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17	25	14	18	17	1
제5장 문화창조 연대도시	18	26	18	24	23	1

1 정량평가(131개)

- 평가방법 : 실적값을 대입하여 측정산식에 따라 산출
 - 매년 12월 말 기준,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개선 또는 증감현황 분석
 - 시청 등 행정조직 생산 자료나 연간 단위의 통계 이용하여 실적 자체평가(추진부서) 및 제출자료 확인(인권평화협력관실)
- 산출결과 : 131개 중 101개 산출
 - 산출불가 사유 : 통계(실적)자료 발표시기 미도래, 중앙부처통계청 등 통계 미실시 등
 - * 지표영역이 광범위하여 통계 또는 실태조사를 거쳐야 실적추출이 가능한 지표는 별도의 용역수행 필요

2 **정성평가(14개)**

- 평가방법 : 외부기관(광주전남연구원) 등 의뢰 설문조사
- 설문대상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 일반 시민(1,142명)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초점집단(852명)
 - . 생활복지시설 이용인(200명) :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복지시설 이용인
 - . 노동청소년(200명) : 광주광역시에서 노동하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 . 광주시 거주 외국인(215명)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외 국가 출생자
 - . 청소년(237명)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 구성항목 : 4개 항목
 - 인권의식(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인식(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인권경험(인권상황에 대한 차별·침해 경험), 인권평가(인권상황 개선도 평가)
- 설문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 ※ 대중교통 노선편의도 설문은 소관부서에서 자체 설문조사 실시(4,072명 대상)

3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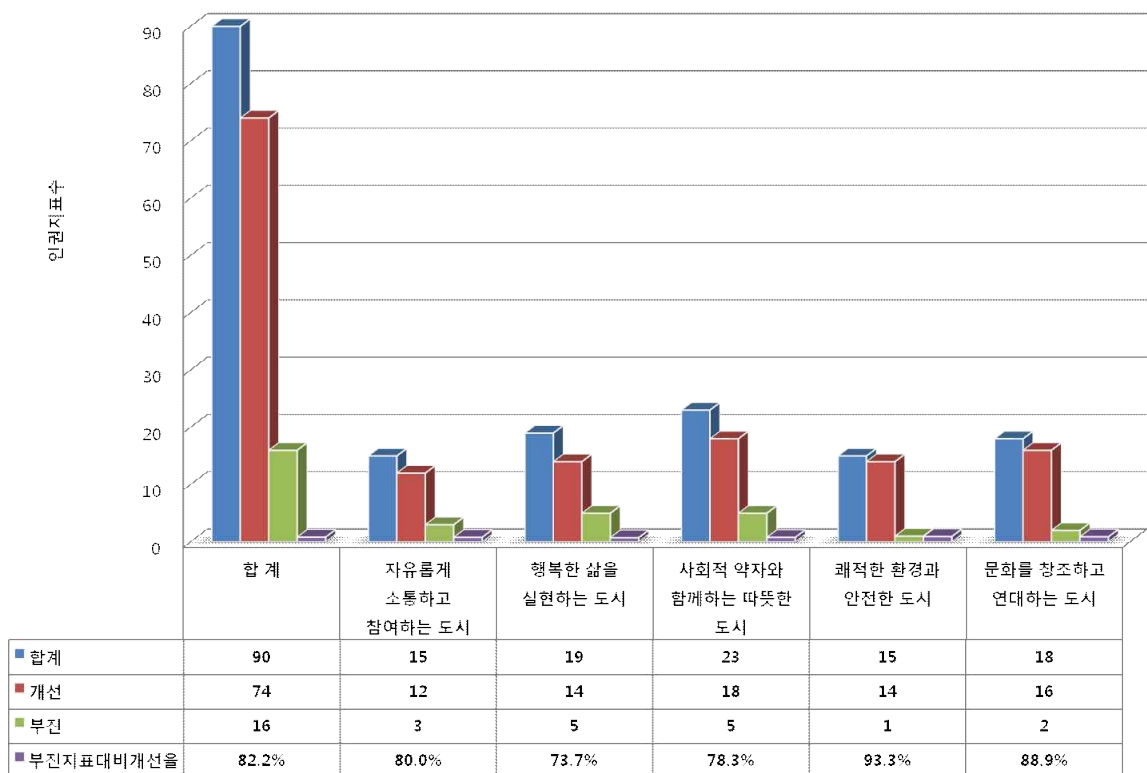
- 14년 대비 15년 증감 변화량 또는 개선율로 인권지표 향상 여부 판단
 - 15년도 (통계)자료 등이 없는 경우 분석 제외
- 15년 하위지표로 신규 설정된 지표는 15년 실적자료만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실적결과로만 분석
-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통한 인권지표 값의 의미 및 2015년 추진실적 평가·심의

IV

2015년 인권지표 총평

- 광주인권헌장 5대 영역 18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구인 100개 인권지표의 2015년도 실천 자체평가 실시와 관련,
- 145개 하위인권지표 중 115개 지표를 분석하였고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90개 지표 중 74개 지표는 개선, 16개 지표는 전년대비 부진한 것으로 분석
- ➔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와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가 전년대비 개선율이 높았으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영역은 취업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국내 전반적인 경제침체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선지표수가 적었음

5대 영역별 개선 인권지표 현황(2014년 대비)



○ 5대 영역의 지표를 분석해 보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영역은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5개 지표 중 12개는 개선, 3개 지표는 부진

- 주요 부진지표 분석

- ▶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결과(72.88점) : △ 3.08%
(행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잘 공개하고 있다는 인권 인식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행정정보공개율이 97.98%로 높은 것을 볼 때 행정정보를 쉽게 접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 시민인권의식 설문조사(56.8점) : △6.18%(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나 인권보호활동의 인권경험 부분에서 35.59%로 저조)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시민사생활보호 만족도 설문은 전년에 비해 2.5% 가량 개선.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은 80%로 2% 증가하였으나 여성참여 비율이 28.2%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할 수 없는 조례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확대 노력 필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영역은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9개 지표 중 14개는 개선, 5개 지표는 부진

- 주요 부진지표 분석

- ▶ 경제침체에 따른 취업자수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대비 58.4%로 전년비교 0.2% 감소
-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률 : 57%에서 54%로 3%격차 심화

○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 중 728명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음

○ 그 외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23.8명에서 22.5명으로 줄어들었고 생활복지시설 인권침해 설문조사에서 전년 76.74점에서 79.91점으로 향상된 것은 고무적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 영역은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23개 지표 중 18개는 개선, 5개 지표는 부진

- 주요 부진지표 분석

- ▶ 여성취업자수 : 15세인구수 대비 48.3%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그 원인으로 보임, 참고로, 전국 평균 대비 취업률보다 6.1% 높음
- 전국 평균(15.12월 말) : 25,879천명(여성 10,925(42.2%), 남성 14,954(57.8%))
- ▶ 소수자의 문화적 포용(64.85점), 외국인 차별경험(71.58점) 설문조사 : 전년대비 1~2% 감소하였는데, 소수자 및 외국인을 광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듬어 주고 동등한 시민으로 대해주는 의식 전환개선 및 차별금지 정책 필요

○ 전체 수급자 중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6.8%에서 16% (63,815명)로 증가하였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

○ 장애공무원 고용률 0.4%(총 장애공무원 수 85명) 증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수가 750명 정원이나 62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재활 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는 상황임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영역은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5개 지표 중 14개는 개선, 1개 지표는 부진

- 주요 부진지표 분석

- ▶ 저녹색아파트 실천세대수 :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아파트의 참여아파트 신청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2% 감소

○ 교통약자 이동수단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나 전용택시수 확보, 시각장애인 보행시설 설치는 도입목표에 따라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 필요

- 전체 버스 930대 중 234대 도입(17.8%)/2024년까지 100% 도입 목표

○ 인구 만명당 범죄검거율(15년 상반기기준)은 79.3%로 전년대비 3.7% 높아졌고, 자연재해 취약가구도 192개 가구 중 156개 가구를 해소 (79.7%)하여 전년도 88개 가구에서 대폭 해소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영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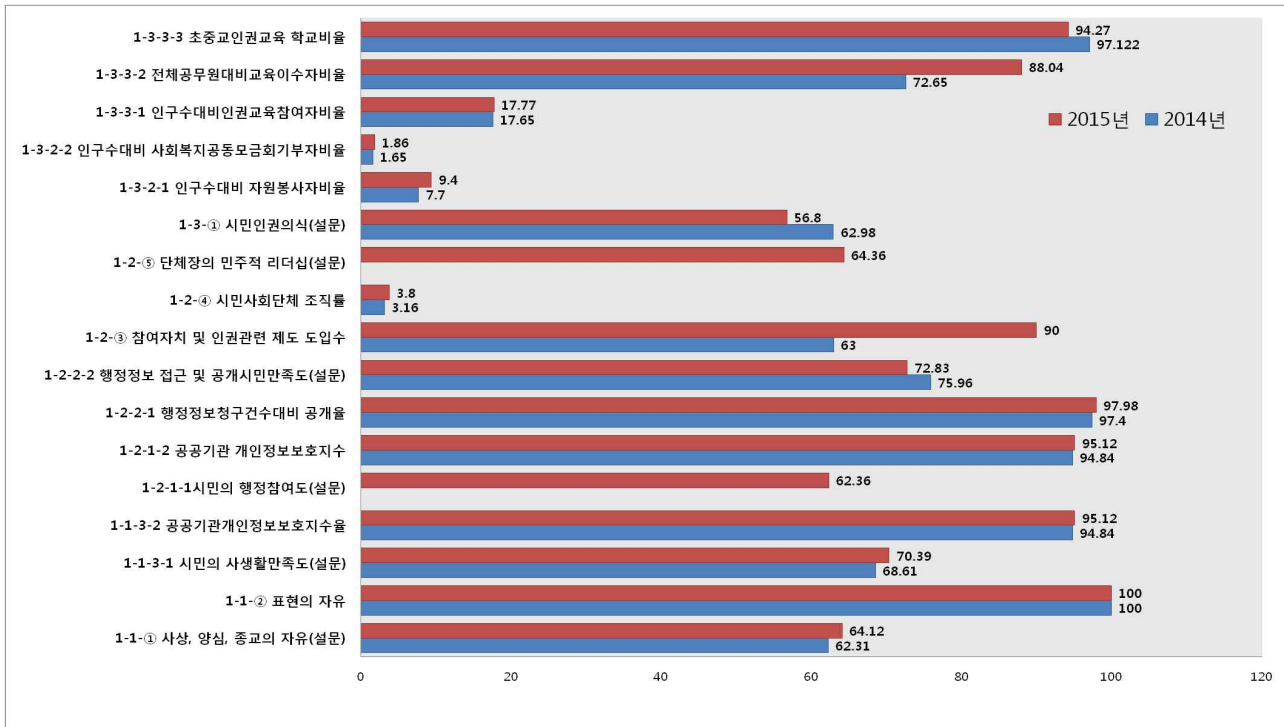
- 전년도 비교가 가능한 18개 지표 중 16개는 개선, 2개 지표는 부진
- 학교생활 스트레스 인권지수(83.64점) 중 학업스트레스 지수(70.41점)가 친구나 교사·학교생활 스트레스보다 월등히 높아 학업위주의 경쟁구도에 따른 요인으로 분석
- 초·중 무상급식 및 교육예산 지원은 전년도 비해 2.7%, 4.4% 소폭 증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으며
-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나 인권마을만들기 등 인권문화 확산사업은 매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로 완성도가 높아가고 있음. 특히, 인권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스스로 만들어가는 인권공동체사업으로 2016년 한국인권회의에서 우수 모델사업으로 타 지자체 소개

『인권지표 분석에 따른 문제점』 관련

- 2015년 3월, 100대 지표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운영 개선·보완 하였으나 일부지표는 지표로서의 대표성 문제, 통계자료가 없어 자료 추출이 불가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
- 아울러, 100대 지표가 시정 전 분야의 인권지수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순기능은 있지만, 지표수의 방대함, 단순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지표와 인권 정책지표가 혼재 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 정책 실현 필요
- ➡ **현 인권지표의 문제점을 2017년부터 시행되는 인권도시 기본계획 반영 및 인권정책 T/F팀·인권증진시민위원회 등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시행,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도시 광주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제1장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지표 11/하위 17개]



가. 정성평가/설문조사[6]

항 목	2014년 인권지수	2015년 인권지수	인권 의식	인권 인식	인권 경험	인권 평가
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62.31	64.12	39.81	64.29	90.59	61.79
2. 시민사생활 보호	68.61	70.39	80.84	61.64	78.62	60.47
3. 시민의 행정 참여만족도		62.36	78.75	51.29	58.72	60.67
4. 행정정보 공개율	75.96	72.88	87.29	50.15	93.50	60.56
5. 단체장의 민주적리더십		64.36	82.63	50.10		60.36
6. 시민인권 의식	62.98	56.80	70.01	59.01	35.59	62.57

※ 『단체장 민주적 리더십』 인권경험 설문은 경험일반을 표현하기에 제한적이며 객관성 확보 문제로 설문 제외 구성(설문기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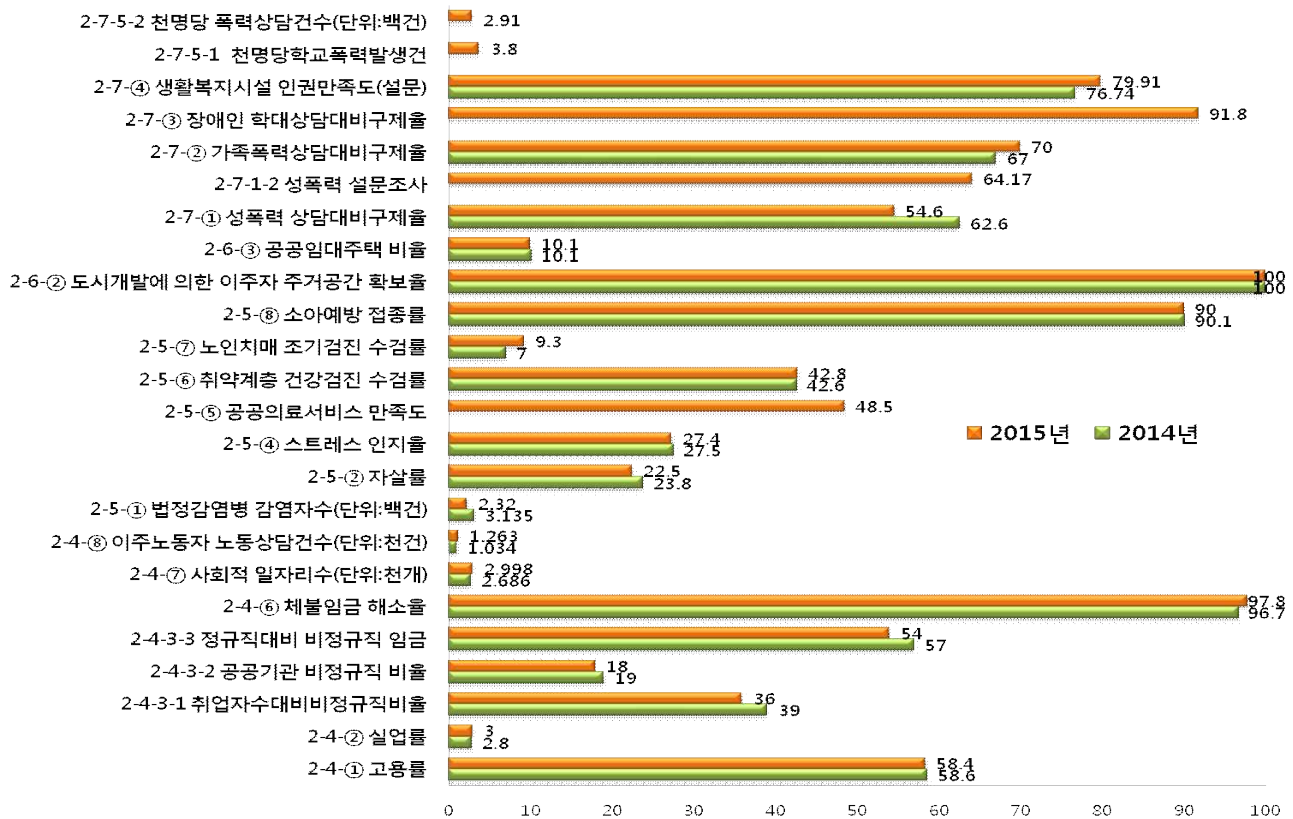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시민사생활보호는 소폭 상승, 행정정보 접근 및 공개율은 전년대비 3% 가량 낮아졌는데, 실제 행정정보공개율은 97.98%로 전년대비 0.5%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행정정보를 잘 공개하고 있다는 행정정보공개 지표의 인권인식 설문결과, 51.29점의 낮은 점수를 보임
- 시민인권인식은 전년대비 6.18% 하향하였는데 인권경험(사회약자를 위한 봉사나 인권보호 활동경험)부분에서 감소폭이 큰 것이 요인임.
-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 중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소통을 잘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묻는 인권인식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편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나. 정량평가(11)

- (기부참여율) 15년 자원봉사자 참여자수는 137,730명으로 인구대비 전국 1위의 참여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또한 27,743명 참여, 85여 억원 기부로 전년대비 0.21% 소폭 증가
- (인권교육) 공무원 인권교육도 전체 공무원의 88%가 참여, 전년대비 15% 증가, 양적 확대가 되었으나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권교육 필요
- (행정정보공개, 시민 위원회 참여) 행정정보 공개율 97.98%, 위원회 시민참여비율 80%로 전년대비 각각 0.58%, 2% 상승하였으나, 위원회 여성비율이 조례에서 정한 성비를 맞추지 못해 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사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국가인권위에 권리구제 신청자료는 있으나 지역추계를 하지 않아 지표로서 관리 애로

제2장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지표 20/하위 24]



가. 정성평가/설문조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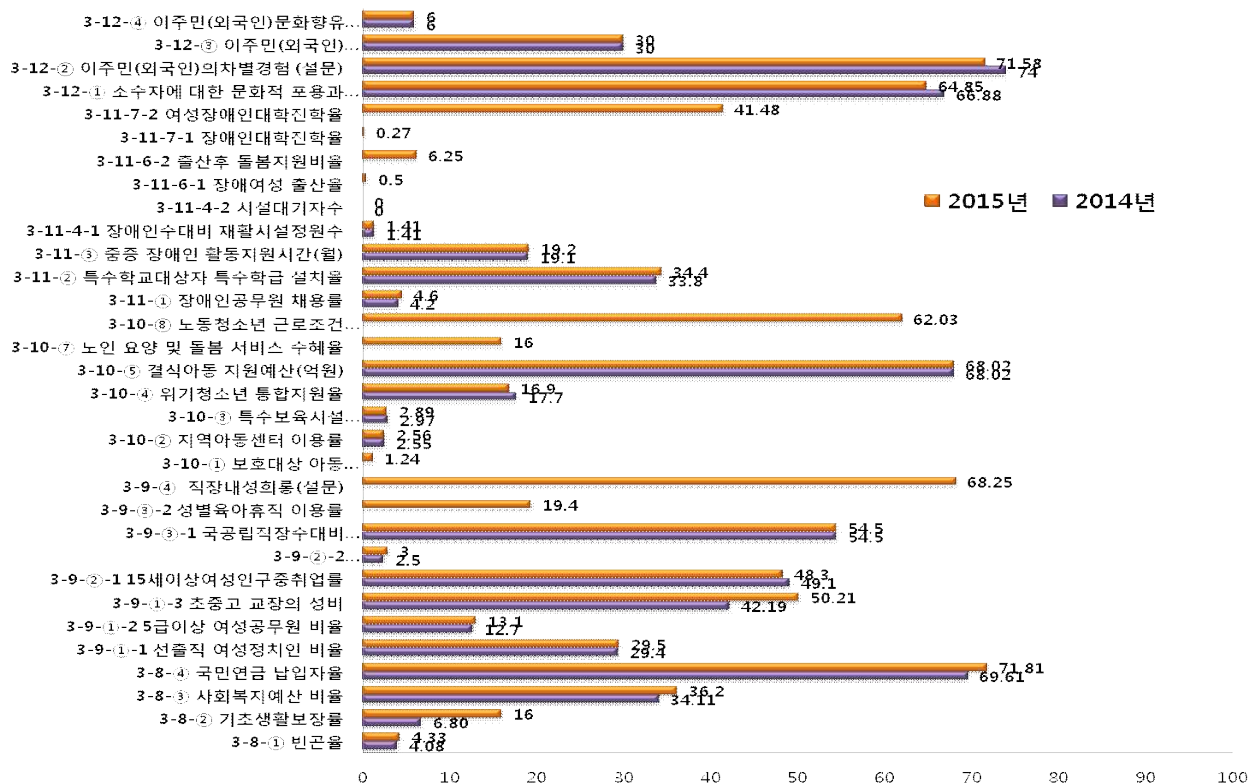
항 목	2014년 인권지수	2015년 인권지수	인권 의식	인권 인식	인권 경험	인권 평가
1. 성폭력 발생 및 구제		64.17	59.28	46.35	94.11	56.95
2. 생활복지시설인권만족도	76.74	79.91	70.05	97.74	97.24	72.61

○ (성폭력) 인권지수는 64. 17점으로 인권인식(광주는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편 ,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지원)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개선노력 필요

○ (생활복지시설 인권만족도) 인권지수는 79.91점으로 전년도 76.74점에 비해 3.17점 상승하였고 특히, 복지시설에서 감금, 학대, 언어적 폭력 경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복지시설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정량평가(22)

- (취업율, 체불임금) 민선6기 고용률 목표가 60.9%로 현재 58.4%를 달성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 감소
체불 임금 발생 4,948건에 4,840건을 처리, 발생건수 대비 97.8%를 처리하였음
- (비정규직비율)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6%(취업자 554천명 중 197천명)으로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또한 6,238명 중 1,109명으로 전체 직원대비 18% 차지, 전년대비 1% 정도 감소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의 성과가 보임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896명 중 728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우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이 엿보임
- (이주노동자노동관련 상담) 광주외국인인력지원센터 등 7개 기관에서 1,263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전년대비 230여건 늘어 이주민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과 지원의 창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됨
- (자살률) 인구 10만명 당 22.5명으로 전년 23.8명보다 1.3명이 감소하였는데, 자살예방지킴이 9,606명 양성, 자살위기 상담 7,444건 등 적극적 자살예방정책 추진성으로 보임
- (가정·장애인·학교폭력) 가정폭력 지원 4,217건 장애인폭력 지원 1,077건, 학교폭력 상담 64,600건 및 852명 피해발생, 특히 학교폭력은 학생 천명당 3.8명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안전강화학교 운영 및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등 학생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학생들은 학기당 2시간씩 학교폭력교육 이수하고 있음



가. 정성평가/설문조사(4)

항 목	2014년 인권지수	2015년 인권지수	인권 의식	인권 인식	인권 경험	인권 평가
1. 여성안전(직장내 성희롱)		68.25	76.82	47.34	89.39	59.45
2.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포용	66.88	64.85	67.44	49.68	83.48	58.79
3. 노동청소년근로조건보장도		62.03	80.14	47.13	62.39	58.48
4. 외국인의 차별경험도	74	71.58	81.10	71.58	66.34	67.28

○ 소수자의 문화적 포용이나 외국인 차별경험도에서 전년보다 1~2% 지수가 낮아져 외국인, 북한이탈, 성 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포용 및 광주시민과 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 외국인의 차별이나 침해경험에 66.34점,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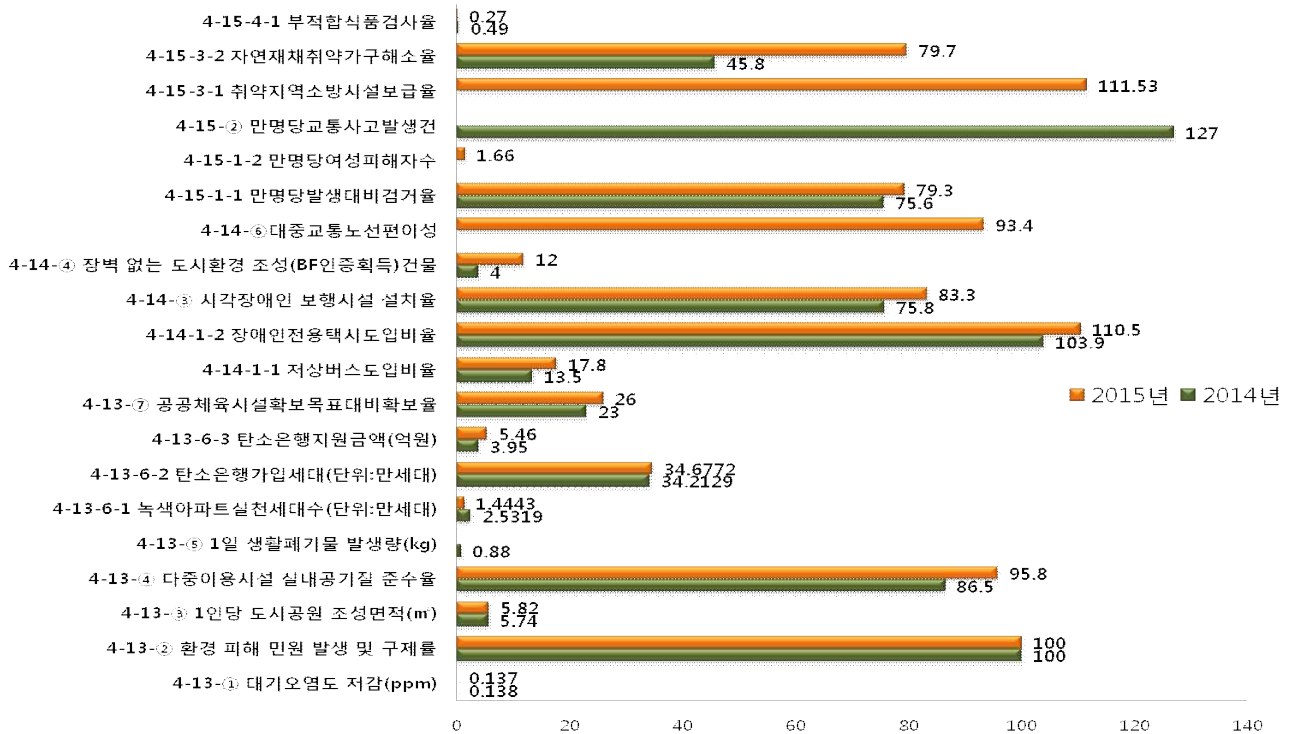
67.28점을 보여 외국인(이주민)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이나, 모국 방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으나 아직은 이주민이 체감하는 인권실현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나. 정량평가(28)

- (빈곤율, 기초생활보장율) 기초생활수급자수가 전체 인구대비 4.33%로 전년대비 2.5% 늘었고 신규 수급자 또한 9.2% 늘어나 빈곤율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 40%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를 받은 기초수급자가 늘어난 결과임
- (여성대표성) 5급이상 여성공무원수가 전체의 13.1%로 2014년 12.7에서 0.4% 증가, 초중고 교장비율이 48.3%로 교육부 목표인 36%를 상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 필요
- (특수학급대상자 특수학급설치율) 전체학교 587개교 중 202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으며, 특히 사립고의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필요
- (장애인 재활시설설치수) 장애인 재활 시설수 정원은 750명이나 626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재활시설수 부족에 따른 문제는 없는 상황임
- (여성장애인 출산 및 돌봄지원) 가임장애인 6,390명 중 32명이 출산, 출산율 0.5% 및 출산장애인 32명 중 2명에게 돌봄지원을 하여 출산 및 출산후 돌봄지원 확대 필요
-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나 특수보육시설 지정, 결식아동 지원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제4장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지표 13/하위 18]



가. 정성평가/설문조사(1)

- (대중교통편의도) 주2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4,072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편의도 설문조사 결과 93.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

나. 정량평가(17)

- (교통약자이동수단도입율) 18년 도입목표 372대(국토부 전체버스 대비 40% 권장목표) 대비 15년도 234대가 도입되었으며 전체버스(930대) 대비는 17.8% 비중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저상버스 도입률 제고 필요
 - 2024년까지 930대(100%) 저상버스 확보계획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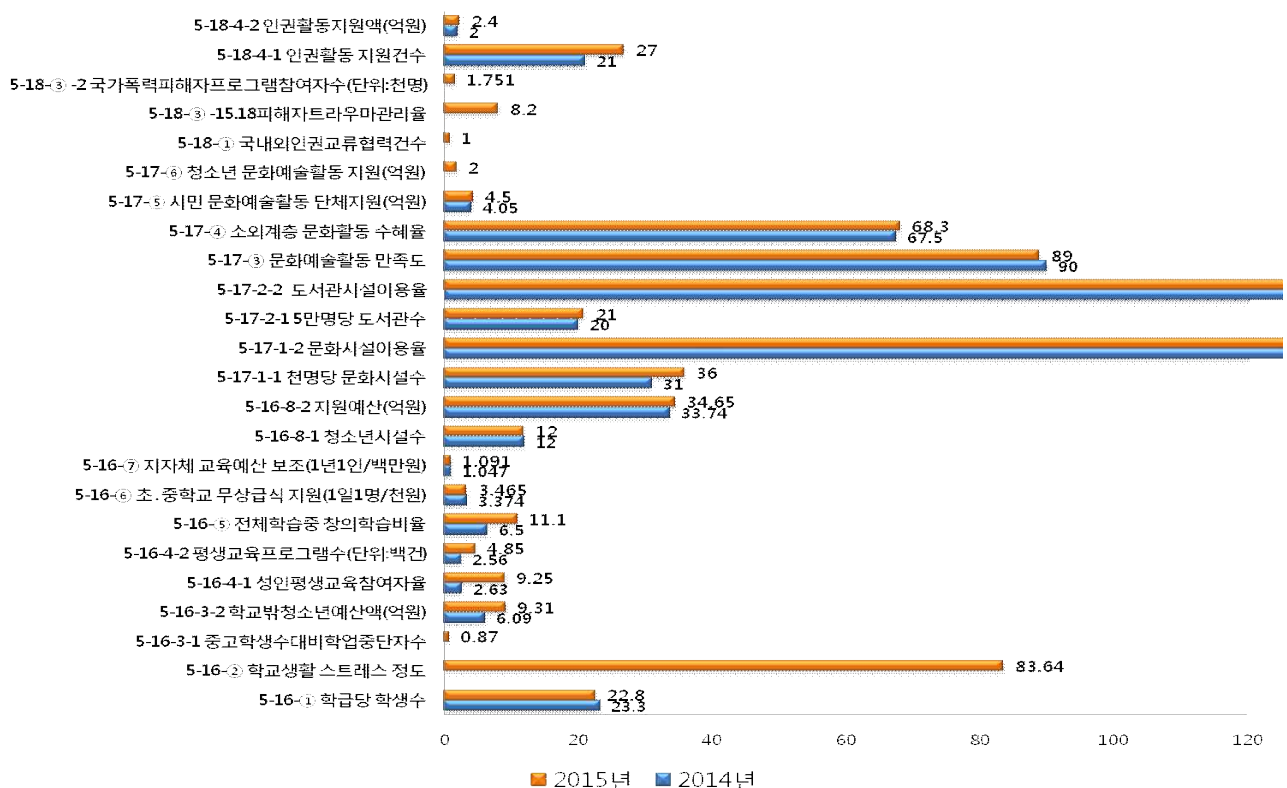
다만, 장애인전용택시 보유는 1,2급 등록장애인수 대비 기준목표량을 상회하여 보유

- 법정대수 76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기준), 보유 84대

- (유통식품안전성 확보) 전체 검사 5,602건 중 15건이 부적합하여 부적합율 0.27%로 전년 0.49%대비 0.22% 개선되어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
- (통합대기지수) 7대 대도시 중 오염도가 가장 낮고 12~15년도까지 오존주의보 미발령 등 깨끗한 대기환경 보유
- (BF 인증획득) 16년까지 25개 획득을 목표로 14년 11개소에서 15년 12개소가 추가되어 23개소가 BF 인증을 받는 등 장벽없는 도시환경개선에 기여

제5장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지표 18/하위 24]



가. 정성평가/설문조사[1]

항 목	2015년 인권지수	구 분	
• 학교생활스트레스	83.64	학업	70.41
		친구	92.00
		교사 및· 학교생활	88.51

- 학교생활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업스트레스로 학벌위주, 경쟁 위주의 학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아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자존감 형성 노력과 함께 경쟁일반도의 교육환경 혁신 필요

나. 정량평가[23]

- (학급당 학생수) 한 학급당 14년 23.3명에서 15년 22.8명으로 소폭 개선되면서 교사와 학생간의 눈높이 교육 개선기대
- (초·중 무상급식 및 교육예산 지원) 1일 3,374원(14년)에서 3,645원(15년)으로 급식비 소폭증가 및 학생 교육지원예산 또한 1,047천원에서 1,091천원으로 44천원 지원이 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효과
- (공공문화시설과 도서관 접근도 등) 인구 천명당 공공문화시설 수가 31개에서 35개소로, 도서관은 20개에서 21개소로 늘어 문화수혜 혜택의 폭이 소폭 증가
- (인권관련 활동지원) 인권단체 협력 19, 인권마을만들기 8 등 27건 지원, 인권문화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함. 인권마을만들기사업은 인권마을 협의체를 구성, 인권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인권마을 만들기 정보공유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타 시·도 우수사례로 부각되고 있음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보고 : '16. 4. 8.
- 2015년 인권지표 평가 및 2016년 추진계획 송부(관련부서) : '16. 4.
 - 부진지표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인권지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 : '16. 5.
 - 인권도시기본계획 과업내용 반영 개선
 -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인권정책 TF 자문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개선 인권지표 추진계획 확정 및 부서 안내 : '16. 12.
- 2016년 인권지표(정성평가) 설문조사 실시 : '16. 하반기